

국토부·환경부,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 연계 확대 추진한다

- 해안권 발전사업에서 내륙권 발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까지 생태관광 연계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, 이하 국토부)와 환경부(장관 김완섭)는 ‘국토-환경 정책협의회*’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.
 - *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(국토정책관)-환경부(자연보전국장) 교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
- 이번 회의에서는 △지난해(’24년)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(컨설팅) 결과 공유, △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, △’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‘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*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.
 - * 「해안내륙발전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,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등
-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(컨설팅)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,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.
-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, 고흥,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을 추진했고,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,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·제안했다.
- 특히, 올해(’25년)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-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에 대해 사후 진단(컨설팅)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.
-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해 5월 중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최종 3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“부처 협업과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의 연계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“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여가 활용은 환경과 쉼, 치유가 중시되고 있다”라며, “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생태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 등을 접목해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지속 하는 지역개발 및 관리의 본보기를 창출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	(044-201-3662)
		담당자	사무관	조성돈	(044-201-4558)
공동	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	책임자	과 장	정호경	(044-201-7316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란	(044-201-7311)



-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-
국토부-환경부 협업과제 현장토론회 개최계획(안)

□ 토론회 개요

- (때 · 곳) 4.24.(목) ~ 4.25.(금), 전남 고흥·여수 일원
- (참석자) 국토부 국토정책관, 환경부 자연보전국장, 전문가 등 13명
- (내 용) 양 부처 및 전문가의 협업과제 관련 발표, 현장방문 등

□ 주요내용

- (국토부) 25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
- (환경부) 우리나라 생태관광정책 발표
- (한국생태관광협회) '24년도 생태관광컨설팅 결과 발표
- (현장방문) 고흥군 금의시비공원 조성사업, 여수시 여자만 갯가노을사업 등